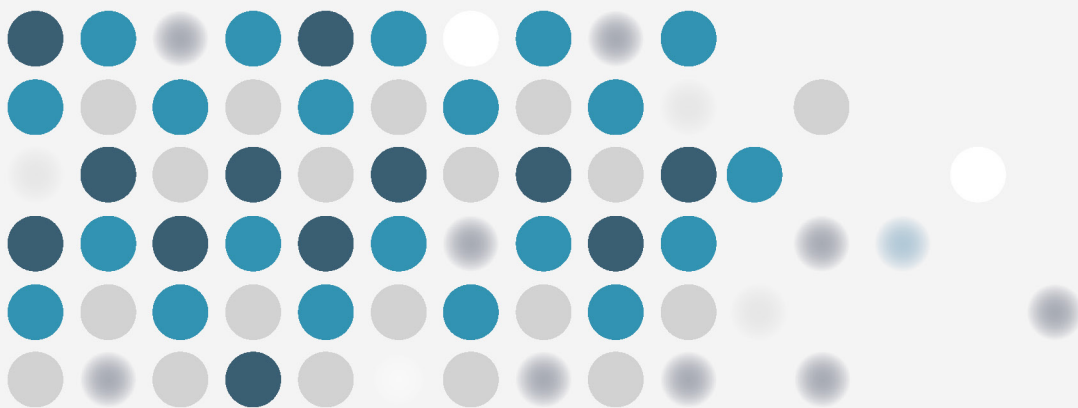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방안연구 6

한·중 형사정책 동향 비교연구: 반부패 정책

김한균 | 김경찬 | 김은영 | 정유진



발간사

본 보고서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방안 연구」 8가지 세부과제 중의 하나로 기획된 연구성과로서, 특히 중국 동북3성지역내 형사사법기관 및 연구기관과의 형사사법 협력방안을 발전적으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정책의 한 축으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을 제시하여, 동북아 지역의 대립과 갈등 구도를 다자간 대화와 협력의 질서로 전환함으로써 역내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2년부터 중국 동북3성 (지린성, 랴오닝성, 흑룡강성) 지역 거점대학들과 함께 동북아 지역 형사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을 공동주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가 동북아형사정책 포럼 사업을 중심으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지향하는 가운데 중국동북3성지역내 형사사법 연구협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구를 성실히 수행해준 김한균 국제협력센터장과 김경찬 부연구위원, 김은영, 정유진 연구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강진환**

목 차

국문요약	1
------------	---

제1장 서 론 (김한균)	5
-----------------------	---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대상	7
----------------------	---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7
---------------------	---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8
---------------------	---

제2절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형사정책 분야 지역협력 메커니즘 제도화 필요성	10
---	----

제3절 중국 동북3성 형사정책 연구협력의 의의와 필요성	14
--------------------------------------	----

제2장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 성과와 평가 (김은영·정유진)	17
---	----

제1절 제1차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의 성과와 평가	19
-----------------------------------	----

1. 개최배경 및 의의	19
--------------------	----

2. 참여기관과 전문가	20
--------------------	----

3. 일정	20
-------------	----

4. 세션별 주요발표 내용	21
----------------------	----

5. 성과 및 평가	27
------------------	----

제2절 제2차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의 성과와 평가	28
-----------------------------------	----

1. 개최배경 및 의의	28
--------------------	----

2. 참가기관과 전문가	28
--------------------	----

3. 일정	29
-------------	----

4. 세션별 주요발표 내용	29
5. 성과 및 평가	32

| 제3장 | 한·중 반부패정책 비교연구 (김은영·정유진) 33

제1절 제3차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의 성과와 평가	35
1. 개최배경 및 의의	35
2. 참가기관과 전문가	36
3. 일정	36
제2절 주요 발표내용	39
1. 부패범죄의 입법 연구	39
2. 뇌물수수범죄의 문제점과 인정	40
3. 부패범죄의 실태 및 대응과 사법협력	42
4. 부패범죄에 관한 정책적 연구	43
5. 성과 및 평가	44

| 제4장 | 한·중 형사정책 비교연구의 과제 (김경찬) 45

제1절 중국의 한국형사사법 연구동향	47
1. 중국 형사법의 특징	47
2. 중국의 한국 형사법에 대한 관심과 노력	47
3. 중국의 주요 관심사항	48
4. 연변대학 법학원 한반도 법학연구성과 목록	49
제2절 중국의 형사정책연구기관	52
1. 길림대학 법학원	52
2. 요녕대학 법학원	52
3. 흑룡강대학 법학원	52
4. 연변대학 법학원	53
5. 내몽고대학 법학원	53

제3절 한국의 중국형사사법 연구동향	54
1. 한국 형사법의 특징	54
2. 한국의 중국 형사법에 대한 관심과 노력	54
3. 한국 형사사법 실무계의 관심	55
 제5장 결 론 (김한균)	57
1.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한·중 형사정책 연구협력의 과제	59
2. 동북아 형사정책포럼 발전을 위한 전망과 과제	60
 참고문헌	63
 Abstract	65

표 차례

〈표 3-1〉 제3차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 일정표	37
-----------------------------------	----

국문요약

1. 본 연구는 2015년도 「국제 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사업」의 세부과제로서,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 지역 형사사법 협력사업의 하나로 기획되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등 동북아 주요국가와의 형사사법분야 지역협력 연구사업을 본격화하면서, 특히 중국 동북3성지역내 형사사법기관 및 연구기관과의 형사사법 협력방안을 발전적으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현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추진하고, 민간과 정부가 다 함께 참여하는 다차원적 협력을 지향하는 가운데, 비전통 연성안보 의제 (원자력 안전, 에너지 안보, 환경·기후변화, 재난 구호, 사이버 스페이스 등 5대 중점분야)에서부터 협력사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형사정책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비전통 연성안보의제를 단계적으로 접근하는데 적합한 분야라 할 수 있다.

3.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성과달성을 위해서는 ① 다자간 대화와 협력을 통한 신뢰구축, ② 역내 협력메카니즘 구축, ③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유도가 필요하다. 즉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협력의제인 비전통적 연성안보의제 (에너지 안보, 원자력 안전, 사이버이슈, 기후변화)로서 마약이슈부터 접근하는 방식이 적절하며, 동북아 지역 기존 형사사법 분야 협력사업을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틀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4.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유엔 마약 및 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아태지역사무소와 Towards AsiaJust 등 아시아 지역

2 한·중 형사정책 동향 비교연구

내 형사정책 분야의 협력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UNPNI 기관으로서 동북아 지역 내 평화협력구상의 형사정책적 실현을 위한 연구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현재 마약, 사이버범죄 및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형사정책 분야의 다양한 연구 및 교류협력을 진행 중이다.

5.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2년부터 중국 동북3성 (지린성, 랴오닝성, 흑룡강성) 지역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대학-검찰-법원-공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북아 지역 형사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을 공동주최하고 있다. 동북아형사정책 포럼 사업을 중심으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지향하는 가운데 중국동북3성 지역내 형사사법 연구협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6. 동북아 형사정책포럼 (Northeast Asian Forum for Criminal Justice)을 통해 마약과 사이버범죄 및 반부패를 중심으로 연구자 및 실무자들의 정기적 교류협력을 체계화하여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형사정책적 실현을 위한 지역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7. 2013년 8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중국 연변대학 법학원, 지린대학 법학원, 랴오닝대학 법학원이 공동주최한 제1회 동북아 형사정책포럼이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발전 및 형사법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중국 지옌벤대학에서 개최되었다. 포럼에서는 중국내 한국관련 범죄 실태 및 대책, 마약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 초국경적 범죄, 형사정책의 최근동향, 한·중 형사사법공조 방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현황 및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형성되었다.

8. 제 1차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은 동북아 지역 내 형사사법 분야 지역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포럼은 동북아 각국의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술교류를 진행하고 지역협력을 논의 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무대가 되었다.

9.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4년 7월 22일 중국 심양시 랴오닝대학교 법학원과 함께 제2회 동북아 형사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랴오닝대학교 법학원, 지린대학교 법학원 및 연변대학교 법학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참여하여 동북아의 교류와 성장 및 형사사법의 공동목표라는 주제로 4개의 세부 세션에서 10개의 논문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10. 제2회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은 동북아의 경제범죄와 형사정책 및 동북아 지역 국가의 경찰과 검찰공동협력을 논의하였고, 세부적으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함께 공감하였다. 중국은 한국과의 교류가 왕성하고 빈번하여 한국관련 경제범죄에 대한 상호간 신속한 정보교류 및 지속적인 상호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였다.

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5년 9월 19일 지린성 장춘시에 소재한 지린대학 법학원과 제3차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을 공동개최하였으며, 「동북아의 부패범죄와 범죄예방」의 주제로 한·중 반부패 대책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본 형사정책 포럼은 ‘부패범죄의 입법 연구’, ‘뇌물수수범죄의 문제점과 인정’, ‘부패범죄의 실태 및 대응과 사법협력’, ‘부패범죄에 관한 정책적 연구’ 총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12. 중국은 형사법제의 개혁과 사법개혁 및 부정부패 개혁 등과 관련하여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로 학술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개혁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을 한국의 학회와 학술기관도 공감하면서 중국의 형사법제와 사법개혁 및 부정부패 개혁관련 추진방향에 관심을 가지며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13. 한국과 중국이 실질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서는 상호문화와 조직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류의 기회를 확대하고 형사사법 관련 논의의 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4 한·중 형사정책 동향 비교연구

14. 동북아 지역 주요국가인 한국과 중국은 상호협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막중한 시점에서 형사사법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교류협력관계 기반위에서 동북아 평화를 주도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굳건히 다져야 한다.

15. 최근 들어 중국이나 동아시아 국가를 거점으로 하는 불법온라인 도박이나 보이 스피싱 등의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는 내국인들이 그 도피처로서 중국이나 동아시아 국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 내 한중간의 사법공조 시스템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구축될 필요성이 인정된다.

16. 중국 동북3성은 한중 양국의 형사사법분야 협력체계 구축이 가장 필요하며 또한 가장 효과적인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으로서 동북아지역 연구협력사업의 중점지역으로서 의미가 크다. 따라서 동북3성의 주요거점대학과 형사사법기관을 중심으로 양국 공통의 현안관심사를 발굴하고 이를 동북아형사정책포럼과 공동연구사업을 토대로 연구와 실무 공히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17. 동북아 형사정책포럼은 한국과 중국의 형사사법분야 협력기반으로서 의미 깊은 사업이다. 특히 동북3성 주요거점 연구기관과 양국 공동 현안에 관한 연구와 정책 협의의 뿐만 아니라, 그 성과를 바탕으로 동북아 내지 아시아지역에서 평화협력의 기반을 함께 구축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제1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서론

김한균

제1장

서론

본 연구는 2015년도 「국제 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사업」의 세부과제로서,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 지역 형사사법 협력사업의 하나로 기획되었다. 또한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 (U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소속 연구기관으로서 14개국 34개 형사정책 연구기관 및 형사사법기관과 연구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등 동북아 주요국가와의 형사사법분야 지역협력 연구사업을 본격화하면서, 특히 중국 동북3성지역내 형사사법기관 및 연구기관과의 형사사법 협력방안을 발전적으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대상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현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역내 협력의 문화를 정착하고 다자간 협력 메카니즘을 제도화함으로써, 동북아에서의 평화협력 기반을 구축하며 북핵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획으로서 본격 추진되고 있다. 특히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추진하고, 민간과 정부가 다 함께 참여하는 다차원적 협력을 지향하는 가운데, 비전통 연성안보 의제 (원자력 안전, 에너지 안보, 환경·기후변화, 재난 구호, 사이버 스페이스 등 5대 중점분야)에서부터 협력사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형사정책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비전통 연성 안보의제를 단계적으로 접근하는데 적합한 분야라 할 수 있다. 즉 사이버보안 뿐만 아니라, 마약범죄, 외국인범죄 등의 다양한 현안에서 형사사법공조와 인권보장의 증진을 목표로 다자간 협력 문화정착과 협력 메카니즘 제도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2년부터 중국 동북3성 (지린성, 랴오닝성, 흑룡강성) 지역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대학-검찰-법원-공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북아 지역 형사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을 공동주최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2년 이후 3개년에 걸쳐 확대발전해 온 동북아형사정책 포럼 사업을 중심으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지향하는 가운데 중국동북3성지역내 형사사법연구협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형사정책 분야 지역협력 메커니즘 제도화 필요성, 그리고 중국 동북3성 형사정책 연구협력의 필요성에 터잡고 있다.

특히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반부패 정책, 한국은 부패방지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반부패 형사정책이 공통의 관심현안이다. 2012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부정부패를 국가존망이 걸린 문제로 규정하고 최우선의 정치과제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이른바 3원칙이 제시되었다. 즉 예방을 강화하여 부패를 저지하고 싶지 않게 하고(不想), 관리감독제도를 강화하여 부패를 불가능하게 하며(不能), 처벌을 강화하여 부패를 못하게 한다(不敢)는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각 국 부패인식지표(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¹⁾에 따르면 중국의 부정부패는 기업과 민간부문이 가장 심각하며, 특히 외국 다국적 기업의 뇌물공여가 당면 현안이다.²⁾ 이에 따라 중국은 뇌물죄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 유엔 반부패협약 비준 이후에는 국가적 부패척결전략과 함께 뇌물공여와 수수행위를 처벌하는 형사사법제도와 형벌정책을 점차 강화해 왔다. 특히 1990년대 중반이후 18,000여명으로 추산되는 국외도주 부패 공무원의 국내송환과 1,350억 달

1) <http://www.transparency.org/cpi2014>

2)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4 (2014)

러에 이르는 국외은닉자산 환수에 노력하고 있다.³⁾

중국의 반부패 형사정책상 특징은 첫째, 대부분의 기업이 국영이기 때문에 기업부패가 곧 정부부패의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업부패에 대한 엄정한 벌금부과와 집행은 정부기관간의 국가재정 단순이동에 불과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둘째, 중국의 반부패 형사입법은 뇌물수수에 대한 사후적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수뢰죄와 증뢰죄의 대칭적 처벌, 뇌물공여에 대한 처벌강화, 이해충돌관계에서의 수뢰범죄 신설 등 부패에 대한 무관용원칙에 입각한 법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뇌물죄 양형에서 법관의 재량을 제한하기 위한 양형기준의 필요성도 제기된다.⁴⁾

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개원 25주년을 기념하여 2014년 12월 3-4일 “부패척결을 위한 도전과 과제: 무관용, 법질서, 정상화”라는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⁵⁾ 2014년 반부패포럼은 반부패 국가정책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선진 사례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2015년부터 한중 형사정책 동향 비교연구와 연구협력사업의 중점을 반부패 정책에 둘 계획이다.

제2장에서는 2013년 및 2014년도 동북아 형사정책포럼의 성과를 평가한다. 이어 제3장에서는 제3차 동북아 형사정책포럼을 통해 본격화된 한중 반부패정책 비교연구의 성과를 평가한다.

제4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형사정책 비교연구의 과제를 전망하기 위하여 중국내 한국 형사사법연구동향과 한국내 중국 형사사법연구동향을 각각 정리하고 분석한다.

3) 김한균, 반부패 형사정책의 국제적 동향과 부패범죄학의 필요성, 형사정책연구소식 제135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4) 김한균, 반부패 형사정책의 국제적 동향과 부패범죄학의 필요성, 2015

5) 본 포럼에서는 정홍원 국무총리, 황교안 법무부장관,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맡았으며, 도널드 존스틴(OECD 전 사무총장), 프랑수와 바디(프랑스 부패예방청장), 김영란(전 권익위원회 위원장), 홍윤식(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장), 폴 오브라이언(미 법무부 부차관보), 드라고 코스(OECD 뇌물방지그룹위원장), 토마스 레만(덴마크 대사), 파리에로(월드뱅크 선임 법률자문위원), 마이클 레비(영국 카디프 대학교 교수)가 기조연설 및 발표와 토론을 맡아 진행하였다. (<https://www.kic.re.kr/news/message/Read.jsp?paramNttID=5589¶mPage=6>)

제2절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형사정책 분야 지역협력 메커니즘 제도화 필요성

오늘날 아시아 국가들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흔히 ‘아시안 세기’라 명명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1세기 중반까지 아시아의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약 6배가량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2050년, 전 세계 GDP의 52%를 차지할 아시아는 세계경제의 중심이 될 것으로 주목받는 만큼, 국제사회 또한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로의 회귀(U.S. Pivot to Asia),’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중국의 꿈 (Chinese Dream),’ 푸틴 대통령의 ‘동방정책’ 등의 국제정치의 전략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⁶⁾

그러나 동북아 지역은 세계 경제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 제 2·3의 경제대국을 포함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다자협력체 부재로 인한 ‘아시아 패러독스’⁷⁾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점점 격화 되어가는 역사 논쟁과 영토 문제를 둘러싼 대립, 동북아의 당면 안보현안인 북한의 핵문제는 지역별 협력과정에서의 큰 장애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박근혜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하 동북아평화협력구상⁸⁾)은

-
- 6) 세종연구소, 2015 동북아평화협력구상 : 동북아 평화협력의 신지평, 동북아평화협력포럼 자료집 (2015년 8월18일)
- 7) “‘아시아 패러독스’라는 표현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전인 2012년 10월 한·중·일 협력 사무국이 주최한 국제포럼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동아시아에서 경제 분야의 복합적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과 반대로, 정치·안보 분야의 갈등이 증가하는 현상을 지칭한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correctasia/220311729023>) 참조.
- 8)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관한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팀, 외교부. (2014).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아시아 패러독스를 넘어 평화협력의 동북아로. 외교부.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Moving beyond the Asian Paradox Towards Peace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영문) 东北亚和平合作构想: 突破亚洲悖论构建和平合作的东北亚 (중문); 안세현 외 2인. (2013).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에너지 협력 방안. 외교부. (외교부 연구과제 보고서); 양무진 외 2인. (2013).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전략 연구. 통일부. (통일부 연구과제 보고서); 외교부. (2015). “통일 시대를 여는 글로벌 신뢰외교” - 2015 외교부 연두업무보고(통일준비 부문 합동 업무보고). 외교부. (보도자료 배포일: '15. 1. 19.);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2015). “2015년 업무보고 ‘통일준비’ 통합 보도자료”.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보도자료 배포일: '15. 1. 18.); 동북아평화협력구상팀. (2014).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집필진: 진창수, 이정민, 최강, 유현석, 이상현, 전성훈, 한석희, 권원순, 박인휘; 제주평화연구원. (2013). 2013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구상. 파주: 제주평화연구원; 임태안. (2014). 박근혜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전망과 추진전략. 주간국방논단. 한국국방연구원. 1-11면; 전봉근. (2014). 동북아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점진적으로 신뢰를 쌓아 나가고 마음을 열어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다자간의 작지만 의미 있는 노력과 협력이 동북아지역의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며, 주변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안을 고민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비전통·연성안보 의제인 원자력 안전, 에너지 안보, 사이버스페이스, 재난구호와 환경·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동북아 국가들 간에 공유되어야 하고, 향후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전통안보로 협력의제를 확장하여 동북아 미래에 대한 공통된 비전을 정립하고 있다. 9)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인 “신뢰외교”(혹은 trustpolitik)는 동북아 국가들이 이해와 협력의 관행을 쌓아 신뢰를 축적하고, 지역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핵·원자력 협력 과제와 추진방안: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 분석. 국립외교원. 1-24면.; 정은숙. (2014).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내실화 및 실천을 위한 제언: ‘헬싱키 프로세스’ 재조명을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이상현. (2014).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 Jpi 정책포럼, 135, 1-15면; 이신화. (2014). 동북아 다자안보 구상: 도전과 과제. Jpi 정책포럼, 137, 6-18면; 조성렬. (2013).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추진 방도: 서울 프로세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정세와 정책, 2013년 6월호, 5-8면; 주철기. (2013). <권두논문>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신협력 시대. Jpi 정책포럼, 120, 3-6면; 진행남. (2013).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의제 및 추진 전략. Jpi 정책포럼, 120, 7-21면.; 국민일보. (2015). “한반도 종단열차 8월 시범운행 추진”, 1월 20일자.; 서울신문. (2015). “[서울&평양 경제 리포트] 분단 남북의 상징 남북중단철도 구상”, 1월 24일자.; 전봉근. (2014a). “[아침을 열며] 동북아 원자력 공동체를 만들자”, 한국일보, 10월 1일자.; (2014b). “[아침을 열며] 동북아 평화협력 기금을 만들자”, 한국일보, 11월 12일자.; 중앙SUNDAY. (2015a). “두만강 허브는 극동의 이스탄불... 박근혜 대통령이면 가능”, 1월 4일 ~ 5일자; (2015b). “북·중·러 접경에 첨단산업 국제도시 세우면 북한도 다자 경험무대서 활동 가능해질 것”, 1월 4일 ~ 5일자.; (2015c). “임진강 하류엔 국제도시, 강원 고성엔 평화공원 ‘시한폭탄’ DMZ가 남북의 블루오션 될 수 있어”, 1월 4일 ~ 5일자.; (2015d). “한국, 동아시아 신질서 위한 새로운 외교 질질”, 1월 4일 ~ 5일자.; 세종연구소. (2014). [세종정책포럼 Special Session III]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구체화와 국제협력. 세종연구소. (포럼 일시: '14. 7. 18.); 진창수. (2014).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실천 과제. [제28차 세종 국가전략 포럼] 동북아 국제정세와 한국의 통일전략. 세종연구소; 제28차 세종 국가전략 포럼('14. 4. 17.); 국립외교원. (2014). 2014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 국립외교원. (포럼 자료집); 외교부. (2014a). “『2014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 개최”. 외교부. (보도자료 배포일: '14. 10. 23.); [첨부 1] 2014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 개요; [첨부 2] 참석인사 명단; [첨부 3]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약황; (2014b). “『2014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 28일 회의 결과”. 외교부. (보도자료 배포일: '14. 10. 31.); [첨부 1] 28일 각 세션별 회의 결과 요약; [첨부 2] 의제별 참석자 명단; (2014c). “『2014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 29-30일 비공개회의”. 외교부. (보도자료 배포일: '14. 10. 31.); [첨부 1] 제1워킹그룹 ‘원자력 안전 및 기타 이슈’ 회의 결과 요약; [첨부 2] 제2워킹그룹 ‘에너지 안보’ 회의 결과 요약; [첨부 3] 제3워킹그룹 ‘사이버 스페이스’ 회의 결과 요약; [첨부 4] 제4워킹그룹 ‘환경·재난구호’ 회의 결과 요약

9) 세종연구소, 2015 동북아평화협력구상 : 동북아 평화협력의 신지평, 동북아평화협력포럼 자료집 (2015년 8월18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¹⁰⁾와 동북아시아협력구상, 그리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¹¹⁾로 구성되어있다.

이는 우선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그리고 남·북한 등 역내 모든 이해당사국을 중심으로 시작 될 것이며, 지역안전 의제를 다룬 대화와 협력 관행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방적 정책 (open door policy)을 채택하였다. 즉, 참여국가들 뿐만 아니라 EU, ASEAN, OSCE 등과 같은 지역협력기구의 개방적 참여와 협조를 통해 초국가적 공동위협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구상이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최대한 많은 ‘구상’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역내 협력의 필요성은 높으나 정치적 이견의 소지는 적은 비전통 연성안보 의제인 재난구호, 원자력 안전, 환경, 공중보건, 에너지 안보, 사이버스페이스, 초국가적 범죄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우선적으로 대화를 촉진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전통안보로 협력의제까지 점차 확장할 예정이다.¹²⁾

이에 따라 외교부는 현재 ①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②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추진 및 유라시아 협력 확대’, ③ ‘한미동맹과 한중 동반자 관계의 조화발전 및 한일관계 안정화’, ④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 ⑤ ‘재외국민의 안전·권익 보호와 공공외교, 일자리 외교 확대’ 의 다섯 가지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다.¹³⁾

10) 북한의 무력도발을 용인하지 않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고 남북간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다.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균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내부적으로는 통일에 대비한 사회적인 역량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1)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 (에너지·철도·물류 연결), 창조의 대륙 (기술·문화 융합), 평화의 대륙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및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으로 만들어 가자는 구상. 외교통상부, 2014, ‘아시아패러독스를 넘어 평화협력의 동북아로’.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 참조.

12) 세종연구소, 2015 동북아평화협력구상 : 동북아 평화협력의 신지평, 동북아평화협력포럼 자료집 (2015년 8월18일)

13) 이중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관련, 외교부가 공개한 추진 현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미·중·러 등 관련국과의 고위급 협의 개최 및 동 협의 계기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소개를 통해 사전 공감대 구축

외교부 관계자들이 지금까지 총 47회 회담 및 면담에 참석하였으며, 2013년에는 ARF(ASEAN Regional Forum)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 (13. 7. 1.)을 개최하였다. 지금까지 총 세 차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현지 설명회’를 일본(13. 11. 18), 미국(14. 2. 27), 중국(14. 3. 15)에서 개최하였으며, 향후 미·중·러·일에서 현지 설명회를 진행하려 한다.

② 다자회의 등 다양한 국·내외 행사 계기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제시 및 공감 확보
동북아 에너지협력 포럼(13. 10. 15.)에 참석하고,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 시 동북아 국가간 회동(13. 11. 17.)을 개최하는 등 관련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외에 외교부가 참석 및 진행한 관련행사로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관련 집중 토론회’(13. 8. 5 ~7.),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한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4년 12월 23일, 청와대에서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김형진 외교비서관, 이장근 외교비서관실 행정관, 법무부 이성규 국제형사과장, 대검 김후균 마약과장, 외교부 신범철 정책기획관, 외교부 이경아 인권사회과장 등이 참석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하였다.

외교안보수석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2015년부터 본격추진하여 2017년 성과달성목표를 ① 다자간 대화와 협력을 통한 신뢰구축, ② 역내 협력메카니즘 구축, ③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유도로 제시하였다. 즉「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협력의제인 비전통적 연성안보의제 (에너지 안보, 원자력 안전, 사이버 이슈, 기후변화)로서 마약이슈부터 접근하는 방식이 적절하며, 마약관련 협력증진(지역협의체 구축, 개도국 마약대책역량 개발)을 위해서는 해당국가 법제도 및 관행에 대한 상호이해, 공감대 형성의 도모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마약분야 동북아 지역 기존협력사업을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틀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신범철 외교부 정책기획관은 반기문 유엔총장이 유엔헌장 제8장 지역안보 협의체가 동북아지역에만 결여되어있음을 지적하고, 2013년 유엔총장-대사협의체에서 국제마약문제를 안보의제로서 최초 제기하여 분위기 조성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대검찰청 김후균 마약과장은 2015년 6월 서울에서 제25차 ADLOMICCO 회의 개최 예정이며,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뒷받침 하기위해 동북아 지역 별도 간담회 개최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정부기관이 아닌 국책연구기관으로서, UNODC 공식옵저버 기관으로서 지역협력 대상국가 법제도 및 관행에 대한 상호이해 증진을 기획추진하는데 장벽이 비교적 낮고 융통성있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 동남아시아지역에서 2009년부터 아시아저스트 사업, 2013년부터 중국 동북 3성지역에서 동북

국제학술회의('13. 9. 5.)', '제주포럼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세션'('14. 5. 29.) 등이 있다.

③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의제별 협력사업 본격 추진

동북아 가스트레이딩 허브 심포지엄 개최('14. 3. 5.) ; 아시아 가스 가격 저감을 위한 동북아 5개국 협의 개최('14. 3. 23.);동북아지역 월경성 대기오염 대응 협력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회의 개최('14. 4. 30.);동북아 오일허브 심포지엄 개최('14. 6. 17.);국제마약회의(International Drug Enforcement Conference; IDEC) 계기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간담회 개최('14. 6. 18.)

④ ASEAN, 남아시아, EU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여 동북아 신뢰 구축의 조력자로 확보

아포럼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바,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① ADLOMICO 국문 및 영문 보고서 및 관련 이슈페이퍼 작성과 국내외 홍보 분야에서 대검과 협력추진, ② 제25차 ADLOMICO 회의 지원 (대검과 공동으로 한국 마약정책성과 및 동북아지역 협력관련 홍보부스 운영 / 국·영문 정책 및 연구성과물 배포 / 동북아지역 참석자대상 부대행사-워크숍), ③ AsiaJust 2015년부터 사업내용 (협의체 운영 / 교육훈련워크숍)에 반영 추진, ④ 동북아포럼 2015년부터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주제관련으로 운영 추진하는 기획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제3절 중국 동북3성 형사정책 연구협력의 의의와 필요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유엔 마약 및 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아태지역사무소와 Towards AsiaJust 등 아시아 지역 내 형사정책 분야의 협력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UNPNI¹⁴⁾ 기관으로서 동북아 지역 내 평화협력구상의 형사정책적 실현을 위한 연구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현재 마약, 사이버범죄 및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형사정책 분야의 다양한 연구 및 교류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 형사정책포럼 (Northeast Asian Forum for Criminal Justice)은 2013년부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주도로 중국의 동북 3성 지역 거점대학(지린대학, 랴오닝대학, 헤이룽장대학, 연변대학)을 중심으로 중국 내 형사사법기관과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동북아지역의 초국가적 범죄 증가의 실태파악과 대응책 모색 및 형사사법 공조강화를 통한 지역협력기반 구축에 기여한 사업이다. 본 포럼을 통해 마약과 사이버범죄 및 반부패를 중심으로 연구자 및 실무자들의 정기적 교류협력을 체계화하여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형사정책적 실현을 위한 지역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4) UN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United Nations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me Network Institutes): 전 세계의 범죄 및 형사정책관련 현안을 다루는 UNODC에서 관장하는 세계 각 지역 및 국가의 형사사법 관련 기관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04년 아시아지역 기관으로는 두 번째로 가입하였다.

한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교류협력기관 중 하나인 연변대학의 주최로 2015년 9월 19일 - 20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에서 연변대학이 주최한 국제학술회의 '2015 두만강포럼'이 진행되었다¹⁵⁾. 토론은 문화, 법학, 경제, 국제정치 총 4개분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남북한을 비롯한 몽골, 중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등 7개국 170명이 참가하였다¹⁶⁾. 북한에서는 김일성대학 경제학부 교수 리명숙과 부교수 최수광 등 총 7명의 학자들이 참석하여 동 포럼이 마련한 중·조 학자 대화에서 연변대학 교수진과 나진·선봉 지역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15) 주간조선, "위압적인 중국학자들, 위축된 북한 학자들".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376100016&ctcd=C02>

16) 건국대 인문학 연구원 통일인문학연구단, "통일인문연, 2015 두만강포럼 참가".

http://tongil.konkuk.ac.kr/bbs/board.php?bo_table=tongil07_a&wr_id=1251&page=10

제2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 성과와 평가

김은영·정유진

제2장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 성과와 평가

제1절 제1차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의 성과와 평가

1. 개최배경 및 의의

오늘날 세계화, 정보화, 위험사회로의 사회적 변화는 범죄현상과 형사법 그리고 형사정책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또한 범죄가 국제화됨에 따라 범죄 대책이 국제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국가 간 형사사법협력은 이미 국제협력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되었고, 동북아 국가의 하나이며, 유사한 문화배경 및 전통 관념을 갖고 있는 한중 양국의 형사법영역의 협력, 교류, 연구 및 논의의 전망은 매우 넓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지린대학 법학원이 한반도와 사회·문화적·정치·경제적, 지정학적 연관성이 깊은 중국 동북3성 지역 역내의 신흥개발지역과 국경지역 등에서의 사회상과 범죄현상, 그리고 예방책 및 형사사법공조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 되었다. 이후, 2012년 8월 지린대학 법학원, 연변대학 법학원, 그리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뜻을 모아 틀을 확정하였다. 동북아 형사정책포럼은 2013년 6월 랴오닝대학 법학원이 참여확정을 하면서 동북 3성과의 기틀이 만들어졌다.

2013년 8월5일부터 8월9일까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중국 연변대학 법학원, 지린대학 법학원, 랴오닝대학 법학원이 공동주최한 제1회 동북아 형사정책포럼이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발전 및 형사법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중국 지린성 연톈시 소재의 연변대학 과기부 학술보고청에서 개최되었다.

포럼에서는 법학원 및 법원 법관과 검찰원 실무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국내 한국

관련 범죄 실태 및 대책, 마약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 초국경적 범죄, 형사정책의 최근동향, 한·중 형사사법공조 방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현황 및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형성되었다.

2. 참여기관과 전문가

한국 측에서는 한국 법무부 최기식 과장(통일법제과)을 비롯한, 하태훈 교수(한국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일수 원장(한국형사정책연구원) 외 16명 등 총 19명이 참가하였다.

중국 측 참가자로서는 중국 연변대학 법학원 이보기 원장 외 4명을 비롯하여 중국 연변자치주 검찰원, 중국 연변자치주 법원, 지린대학 법학원 교수진, 지린성 법원 검사, 랴오닝성 법원, 랴오닝대학 법학원, 랴오닝성 검찰원 및 화북과기대 변호사 등 총 16명이었다.¹⁷⁾

3. 일정

동북아 형사정책포럼의 개회식은 김일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와 이홍명 지린대 법학원 당서기, 이보기 연변대 법학원장, 통연발 랴오닝대 법학원장 (로준 교수 대독)의 축사로 진행되었다.

이어 총 25편의 발표가 (1) 중국내 한국관련 범죄 실태 및 대책, (2) 보이스피싱/조직 범죄의 실태와 대책, (3) 마약범죄의 실태와 대책, (4) 초국가적 범죄문제와 대응방안, (5) 형사정책의 최근동향, (6) 한·중 형사사법 공조방안 등 총 6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 되었다.¹⁸⁾

17) 더 자세한 2013년 제 1동북아 형사정책포럼 참가자 내용에 관하여는 2013 UN·국제협력사업 성과보고서 참조. 2014, 140면.

18) 2013년 제 1동북아 형사정책포럼 참가자 및 세부 일정표 관하여는 2013 UN·국제협력사업 성과보고서 참조. 2013,

4. 세션별 주요발표 내용¹⁹⁾

가. 중국내 한국관련 범죄 실태 및 대책

제1 세션에서는 중국내 한국 관련 범죄 실태 및 대책을 주제로 연변지역 한국 관련 범죄 실태와 문제점 (金昌俊 교수, 연변대), 랴오닝성 조직범죄개념 연구 (路军 교수, 랴오닝대), 심양지구 소수민족 유동인구 범죄예방대응대책연구 (조병귀 교수, 랴오닝대)에 대하여 논문발표 및 논의가 있었다.

나.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의 실태와 대책

제2세션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의 실태와 대책을 주제로 ‘연변지역 한국 관련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태’ (玄松鶴 교수, 연변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동향과 법제도적 방향 모색’ (윤해성 연구위원, 형정원), ‘중국 조직범죄의 현황과 대응’ (邢志人 교수, 랴오닝대), ‘한국 조직범죄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으로서의 지하경제양성화 전략’ (강석구 연구위원, 형정원)에 대해 논문발표와 논의가 있었다.

1)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동향과 법제도적 방향 모색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동향과 법제도적 방향 모색’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와 그 수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²⁰⁾되고 있다. 반면, 이에 따른 법률적 보완과 현재의 정의규정으로서는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폭넓게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처벌강화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피해자의 착오에 의한 재산처분 행위가 없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송금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의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특별법상 사기죄에 준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²¹⁾

19) 세션별 요약은 『제1회 동북아형사정책 포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간에 실린 발표문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20) 금융감독원 2011년 11월 24일 보도 자료에 의하면 카드론, 공공기관을 가장한 인터넷 피싱사이트 등 신종수법으로 인해 연간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규모가 약 142.5억 원 (1.435건)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1회 동북아형사정책 포럼 자료집』, 2013, 49면.

21) 윤해성, 『제1회 동북아형사정책 포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49면

여기서는 카드 대출 등 기타 변종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정의규정과 형법상 사기죄에 준하는 벌칙규정, 그리고 양형기준이 지적되었다.

또한 한국에서는 컴퓨터 등 사용 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처벌하고 있는데, 현금인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이를 처리하는 행위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현금 인출책이 현금을 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경우 간접 정범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죄가 국제적 범죄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국의 보이스피싱 관련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에서의 형법과 특별법의 개정방향과 함께 형사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²²⁾

2) 한국 조직범죄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으로서의 지하경제양성화 전략

‘한국 조직범죄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으로서의 지하경제양성화 전략²³⁾’에 따르면 불법취득재산환수 대책의 일환으로 2001년 금융정보분석원의 설립, 관련법 제정²⁴⁾ 및 2006년 대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전담반을 설치하여 2,500억원의 범죄수익을 환수·보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지하경제 전체 규모가 약 290조원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만족할 만한 성과로 볼 수 없으며, 실효성 있는 대응책으로서 지하경제양성화 전략이 제안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지하경제양성화 정책 분석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의 사채업의 양성화 전략은 통제장치 및 감독기관의 부재로 인해 사채업자들에 합법적인 자금세탁 루트를 확보해준 결과로 나타났다. 2005년 노무현 정부는 문화예술킨흥법을 개정, 현금과 동일한 유동성을 지니는 상품권에 대한 사실상의 감독권한을 문화관광부에 부여하였고 2006년 게임산업진흥법의 제정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같은 해 8월 ‘바다이야기 사태’를 야기하였다.²⁵⁾

22) 윤해성, 『제1회 동북아형사정책 포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49-64면.

23) 강석구, 『제1회 동북아형사정책 포럼: 한국 조직범죄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으로서의 지하경제 양성화 전략』,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24) 일명 ‘자금세탁방지법’으로 범죄수익규제법과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 제정되었다. 강석구, 『제1회 동북아형사정책 포럼: 한국 조직범죄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으로서의 지하경제 양성화 전략』,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109쪽

25) 강석구, 위의 책, 2013, 110쪽.

범죄적 지하경제의 합법화에만 치중한 김대중 정부의 지하경제양성화 정책은 정책 입안가들에게 대표적 실패사례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현 정부는 범죄적이거나 음성적인 지하경제보다는 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다양한 범죄적 지하경제의 규모 자체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영역만을 대상으로 지하경제양성화 정책을 추진한다면 실질세수의 증대와 복지재원이 확충된다 할지라도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경제양성화 정책이 효과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하경제의 규모와 실태의 분석을 통해 양성화 가능한 음성적 사업유형의 도출과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사업유형에 대응한 합법적 수익모델과 이에 대한 실효적 통제방안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범죄수익 규제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규제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나아가 해당 정책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그 용처가 중요하며, 예를 들어 범죄수익 환수자산의 관리주체로서 '국민안전기금'을 신설하여 국민안전복지 및 사법복지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²⁶⁾

다. 제3세션: 마약범죄의 실태와 대책

제3세션에서는 마약범죄의 실태와 대책을 주제로 하여 진행되었다. '랴오닝성 마약범죄 상황보고, 한국인 마약범죄 관련 논의 포함' (郑军男 교수, 지린대), '한국 마약범죄 양형기준과 양형실태' (하태훈 교수, 고려대), '마약류 수형자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정진수 융합형사법연구센터장, 형정원), '마약관련 사물증거 결합사건의 정리 - 양형문제' (杨佩正 법관 -로강 법관 대체발표, 랴오닝성 법원), '중국 마약범죄의 현황과 대응' (박길수, 지린성 검찰원 검사)에 대해 발표와 논의가 있었다.

1) 마약류 수형자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마약류 수형자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마약류범죄는 개인과 사회, 더 나아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도 형사정책 적 대책 마련과 범죄방지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26) 강석구, 위의 책, 2013, 111-113쪽.

야 한다. 뿐만 아니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슈 중 사용자가 치료를 위해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에 대한 처벌문제와 마약류 사용과 연관되는 다른 범죄²⁷⁾문제도 논의되어야 한다.

마약류범죄에 대한 처벌 위주의 정책은 구금인원을 증가시키고 전과자만 양산시킨다는 논점이 제시되었다. 한국은 마약류납품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면 그 심각성이 크지 않지만 이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재범방지의 측면에서 치료 위주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마약류 사용자가 자진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어서 외국 사례를 참고하여 좀 더 효과적인 중독자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을 써야한다.²⁸⁾

라. 초국경적 범죄문제와 대응방안

제4세션에서는 초국경적 범죄문제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사이버범죄 현상과 규제’ (박미숙 선임연구위원, 행정원), ‘엔벤 지역 내 한국인 범죄에 대한 판결의 사례와 문제점’ (金鑑珠 법관, 엔벤시 법원), ‘중국 국경지역 유입과 관련한 한중 정부의 협력방안’(최기식 통일법무과장, 법무부), ‘중국 국경지역 외국인 유입 법률 적용 연구’ (李昶夫 부원장, 지린대), ‘동북아 범죄예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언’(박학모 부연구위원, 행정원)에 대해 발표와 논의가 있었다.²⁹⁾

1) 한국의 사이버범죄 현상과 규제

‘한국의 사이버범죄 현상과 규제’에 따르면 인터넷 발전 속도에 있어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고, 인터넷 경제규모가 이미 GDP의 6%에 달하고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아직까지 사이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와 법 현상을 포섭할 수 있는 새로운

27) 마약류 사용은 그 자체가 범죄이지만 마약류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범죄를 저지른다는 주장이 있다. 한명의 성인 마약류 사용자가 마약류 구입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80~100건의 중대한 재산범죄를 저지른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고 한다. 정진수, 『제1회 동북아형사정책 포럼: 마약류 수형자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175쪽

28) 정진수, 위의 책, 2013, 185쪽

29) 2013 UN·국제협력사업 성과보고서 참조. 2013.

법 개념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가 인터넷 발달로 인한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면에 통신보안이나 관련 법률 및 제도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고, 이로 인해 한국의 사이버 환경은 사이버 관련 범죄가 가장 잘 개발, 발전될 수 있는 최적의 토양³⁰⁾이다.

또한 사이버 범죄 현황 관련 자료가 대부분 추정된 자료이며, 피해규모도 추산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공식통계에 비추어 한국에서의 사이버범죄 총수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며, 다만 그 수법이나 피해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³¹⁾

마지막으로 '동북아 범죄예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언'에 따르면 동북아 범죄예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동북아 범죄예방네트워크의 비전이 제시되었다. 동북아시아는 정치적으로는 서로 다른 국가들에 속하지만, 역사적으로 많은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국경 개방의 확대로 인해 더욱 가까워질 수 있고, "동북아 사회"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범죄예방을 위한 "동북아국제네트워크"의 현실적 필요성으로 인하여국경을 넘어 네트워크화 하는 범죄에 대해 대응하는 지혜와 국제예방네트워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³²⁾

마. 형사정책의 최근 동향

제5세션에서는 형사정책의 최근동향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CPTED 현황과 발전방향' (박경래 연구위원, 행정원), '신 형사소송법과 공소비준제도' (문창해 검사, 연변시 검찰원), '한국에서의 피해자-가해자 조정'(김지선 범죄동향통계연구센터장, 행정원)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이어졌다.

30) 박미숙, 『제1회 동북아형사정책 포럼: 한국의 사이버범죄 현황과 규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225쪽 (출처원본: 이원상, 사이버범죄(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2011, 194쪽)

31) 박미숙, 위의 책, 2013, 231쪽

32) 박학모, 『제1회 동북아형사정책 포럼: 동북아 범죄예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265-272쪽

1)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

‘한국의 CPTED 현황과 발전방향’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범죄사건을 예³³⁾로 들며 범죄의 지역성과 공간성 문제가 제기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차에 걸쳐 연구해온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이하 셉테드³⁴⁾로 표기)’을 소개하였고, 연구현황 과정과 향후 발전 방안이 제시되었다.

2) 한국에서의 피해자-가해자 조정

‘한국에서의 피해자-가해자 조정’ 발표에 따르면 최근 20-30년에 걸쳐 세계 각국에서 응보적 형사사법은 피해자 중심적 사법과 회복적 사법으로 인해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어서 한국에서도 2000년 전후로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회복적 사법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다양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중 피해자-가해자 조정 (victim-offender mediation)이 한국에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주목받으면서 집중적인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조정제도의 활용 및 운영 실태를 살피고, 형사조정제도가 이에 참여한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의 피해자-가해자 조정프로그램은 제도 시행의 역사가 짧아 운영사의 미비점³⁵⁾이 발견되고 있다.

또한, 향후 한국에서의 형사조정제도가 좀 더 회복적 사법의 가치와 이념에 충실한 방향으로 운영되고, 폭력범죄와 소년사건 등 더 다양한 사건유형으로 확대되어 당사

33) 2010년 발생한 부산 김길태 사건, 서울 영등포 김수철 사건, 2012년 발생한 수원 오원춘 사건, 2013년 경남 통영에서 발생한 한아름 살인사건 등 특정 지역 특히 사회 내 취약계층이 밀집된 지역에서 범죄가 발생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박경래, 『제1회 동북아형사정책 포럼: 한국의 셉테드(CPTED)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서울시의 공동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285쪽

34) “셉테드란 미국의 범죄예방연구소(National Crime Prevention Institute, NCP)에 따르면 ‘적절한 디자인과 주어진 환경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범죄발생수준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으로 정의 된다. 이때의 환경이 단지 물리적 환경 내지 도시 설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대한 인식, 사회과학, 법집행 그리고 공동체 조직과 같은 보다 포괄적인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다. “원문출처는 박경래, 위의 책, 2013, 286쪽 참조.

35) “여전히 민사적 성격이 강한 재산상의 분쟁과 관련된 고소사건의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계, 인본주의적 대화중심의 조정방식보다는 문제해결적 합의중심의 조정방식의 운영, 형사조정위원의 전문성제고의 필요성 같은 몇 가지 해결해야할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김지선, 『제1회 동북아형사정책 포럼: 한국에서의 피해자-가해자 조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309-314쪽.

자들 간의 갈등해결과 관계회복을 할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 한중 형사사법 공조방안

제 6세션에서는 한중 형사사법공조 방안을 주제로 하여 ‘중국과 한국의 형사사법협력과 공조방안의 발전방향’ (候春平 변호사, 북경 악성법률사무소), ‘한국과 중국의 수사공조 - 현황과 전망’ (이영주 부장검사, 법무부), ‘아시아 공동체와 아시아 형사법의 임무와 과제’ (김경찬 부연구위원, 행정원), ‘중국 외국관련 형사소송 법률제도 개요’ (肖爽 검사, 랴오닝성 검찰원)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있었다.

1) 아시아 공동체와 아시아 형사법의 임무와 과제

‘아시아 공동체와 아시아 형사법의 임무와 과제’에 따르면 아시아 공동체와 아시아 형법의 임무와 과제에 관하여 먼저 아시아 공동체와 같이 상호 공동인식을 갖고 있는 여러 이질적인 공동체가 하나의 법적인 공동체로 통합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자 무리한 일이다.

이어서 아시아의 법 공동체는 현재의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장단점을 숙지하고, 아시아의 겸손과 미덕이 살아있는 좀 더 성숙한 공동체, 다른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포용적이고 안정적인 아시아 개방 공동체의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다.³⁶⁾

5. 성과 및 평가

제 1차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은 동북아 지역 내 형사사법 분야 지역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포럼은 동북아 각국의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술교류를 진행하고 지역협력을 논의 하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무대가 되었다고 현지 언론 “엔벤일보³⁷⁾”는 보도하였다.

또한 엔벤대학교 이보기 원장, 지린대학교 이홍명 당서기, 랴오닝대학교 루쥘 부원

36) 김경찬, 『제1회 동북아형사정책 포럼: 아시아 공동체와 아시아 형법의 임무와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49

37) 제1회 동북아 형사정책포럼 현지 언론 보도자료 (중문), 아래 링크 참조
<http://www.hybrb.com/show/?idx=36274>. (접속날짜: 2015년 12월 5일)
 기사 원문 한글 번역본은 2013 UN·국제협력사업 성과보고서 148쪽 참조.

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일수 원장은 차년도 이후에도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 개최를 통해 동북아 지역의 범죄와 형사법적 문제들에 대한 지속적 논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 하였다. 이와 관련해 2014년 제2회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은 중국 랴오닝대학교 법학원 주최로, 제3회 2015년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은 중국 지린대학교 법학원 주최로, 제4회 2016년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최로 열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제2절 제2차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의 성과와 평가³⁸⁾

1. 개최배경 및 의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4년 7월 22일 중국 심양시 랴오닝대학교 법학원과 함께 제2회 동북아 형사정책포럼 행사를 ‘동북아의 교류와 성장 및 형사사법의 공동목표’를 대주제로 개최하였다. 제2회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에는 심양시 랴오닝대학교 법학원, 지린대학교 법학원 및 연변대학교 법학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참여하여 동북아의 교류와 성장 및 형사사법의 공동목표라는 대주제로 4개의 세부 세션에서 10개의 논문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제 1세션은 생활건강과 형사법적 대응으로 2명의 논문발표가 있었으며, 제 2세션은 기업범죄와 형사 정책적 대응으로 2명의 논문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제 3세션은 인터넷 도박범죄와 형사법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논의되었으며, 제4세션은 한·중 경찰·검찰공동협력과 사회통합이라는 주제로 3개의 논문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2. 참가기관과 전문가

한국 측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김지영 국제협력센장 외 3명을 비롯한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가 참가하였다.³⁹⁾ 중국 측 참가자로서는 퉁리엔파 요녕대학교

38) 해당 보고서는 김지영 외 10명, 『2014 UN 국제교류협력 사업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92~96쪽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하였다.

39) 김지영 외 10명, 『2014 UN·국제교류협력 사업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법학원 원장 외 3명을 비롯하여, 리홍민 지린대 법학원 당서기 외 2명, 연변대학교 법학원 교수진, 대련해양대학문법학원원장 등이 참가하였다.

3. 일정

제2회 동북아 형사정책포럼은 (1) 생활건강 안전과 형사법적 대응, (2) 기업범죄와 형사 정책적 대응, (3) 인터넷 도박범죄와 형사법적 대응, (4) 한·중 경찰과 검찰공동 협력과 사회통합으로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0편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修連髮(통리엔파) 랴오닝대학교 법학원 원장이 개회사를 하였으며, 李洪明(리홍민) 지린대 법학원 당서기,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김지영 국제협력센터장 대독),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의 축사가 있었다.⁴⁰⁾

7월 23일에는 심양시 화평구公安부를 방문하여 내부시설을 견학하였다. 주요 공공 장소를 중심으로 고화질의 CCTV 설비를 갖추어公安부 내부에서 24시 감시설비를 잘 갖추어 현장 지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피의자가公安부 시설로 들어와서 신문을 받을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이 저장되어 기록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제신문이나 고문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었다.

또한 관련기록 서류와 증거는 별도의 서류보관창고와 증거보관창고에 보관하여 서류와 증거의 분실이나 훼손을 막을 뿐 아니라, 과학적 처리를 도모하고 있었다.

4. 세션별 주요발표 내용⁴¹⁾

가. 생활건강 안전과 형사법적 대응

제 1세션에서는 생활건강 안전과 형사법적 대응을 주제로 하여 ‘한국의 가짜 의약품 관련 범죄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김경찬 부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하 형정원)과 ‘중국 가짜의약품 생산판매죄의 입법발전과 상관관계 문제’ (徐岱 쉬파이, 지린대)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있었다.

40) 제2차 동북아 형사정책포럼 세부 일정은 김지영 외 10명, 『2014 UN·국제교류협력 사업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참조

41) 세션별 요약은 『제2회 동북아형사정책 포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간에 실린 발표문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1) 한국의 가짜 의약품 관련 범죄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한국의 가짜 의약품 관련 범죄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따르면 가짜 의약품 범죄는 그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일종의 탐욕적 범죄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신체적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이자, 의약품과 관련된 시장경제질서를 혼란시키고, 의약품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범죄다.

최근에는 이런 검증되지 않은 가짜 의약품들을 밀수하여 주로 인터넷이나 성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을 통하여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교류와 인적·물적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점차 하나의 경제적·생활적 공동영역이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어려움은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 공통과제다.

한국의 의약품관련 범죄를 다루는 기관들⁴²⁾과 관련기관의 총 사건 접수수를 연도별로 분석하고 정리 하면서 가짜 의약품 범죄의 한·중 공동대응방안을 위해서는 먼저 중국의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나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기관과 관련정보가 교류되고 공유될 필요가 있다.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부작용에 대한 감시와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과 아울러, 일반인을 위한 홍보와 교육 및 감시관련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전문성 확보와 공동수사팀 구성과 안정성 확인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⁴³⁾

나. 기업범죄와 형사 정책적 대응

본 세션에서는 기업범죄와 형사 정책적 대응을 주제로 하여 시장거래 사기행위 형법 규제의 형사일체화사고(赵丙贵 자오빙구이 교수, 랴오닝대법학원), 중국단위(법인) 범죄문제 연구(王充 왕충 교수, 지린대학법학원)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42) 관련 기관들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이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김경찬, 『제2회 동북아형사정책 포럼: 한국의 가짜 의약품 관련 범죄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22쪽 참조.

43) 더 자세한 내용은 김경찬, 위의 책 참조.

다. 인터넷 도박범죄와 형사법적 대응

제 3세션에서는 인터넷 도박범죄와 형사법적 대응을 주제로 하여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도박범죄의 특징과 원인 및 예방대책’ (肖爽 시아오왕 랴오닝성 검찰원, 路军 루쥔 랴오닝대 법학원)과 ‘한·중 관계에 있어 도박범죄에 대한 연구’(박준휘 연구위원, 형정원)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있었다.

1) 한·중 관계에 있어 도박범죄에 대한 연구

‘한·중 관계에 있어 도박범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도박범죄에 대한 규율 체계와 사행산업 실태를 소개한 후, 한·중 양국과 관련되어 발생하고 있는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표 내용은 먼저 한국에서 발행하는 중국인 관련 도박범죄 사례와 중국에서 발행하는 한국인관련 도박범죄 사례를 살펴보았고, 끝으로 정책방향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도박범죄에 관한 연구는 단순히 제도적 관점 외에 경제학적, 심리학적, 사회문화론적, 의료적 관점 등이 포괄되어 접근되어야 한다.

라. 제4세션: 한·중 경찰과 검찰공동 협력과 사회통합

제 4세션에서는 한·중 경찰과 검찰공동 협력과 사회통합을 주제로 하여, ‘한·중 수사공조체제 구축과 추진방향’ (김영규 부장검사, 형정원), ‘중·한 공동범죄 대응 국제 경찰협력 기제 운용의 전망’ (裴兆斌 페이지자오빈, 대련해양대학문법학원원장), 그리고 ‘지린성 옌벤주 사회 내 교정연구’ (崔军勇 최이준용 교수, 옌벤대학법학원)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진행되었다.

1) 한·중 수사공조체제 구축과 추진방향

‘한·중 수사공조체제 구축과 추진방향’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경제적 교류 및 인적 왕래가 활발하여, 이들 범죄의 대응에 대한 한국과 중국 사이의 공조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태다.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형사법 집행기관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수사공조⁴⁴⁾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4) 수사공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정보교환, 2) 사전 인터뷰, 3) 합동수사, 4) 강제추방. 자세

발표문에서는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과 일선 지검에서 수사 중인 중국관련 사건에 대하여 수사담당자를 포함한 합동 실무팀을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고, 중국 내 근거지의 공동 단속 등 실질적 수사공조를 추진하며, 협력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또한 양국은 초국가범죄⁴⁵⁾의 근원적 척결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5. 성과 및 평가

제2회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은 동북아의 경제범죄와 형사정책 및 동북아 지역 국가의 경찰과 검찰공동협력을 논의하였고, 세부적으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함께 공감하였다. 또한 중국의公安부와 한국의 검찰과 경찰의 교류협력확대를 위하여 사법기관과 중국 심양시公安부를 방문하였다.

포럼 행사를 통하여 한국과 심양시의 형사사법 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중국은 한국과의 교류가 왕성하고 빈번하여 한국관련 경제범죄에 대한 상호 간 신속한 정보교류 및 지속적인 상호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였다.⁴⁶⁾

한 내용은 김영규, 『제2회 동북아형사정책 포럼: 한·중 수사 공조체제 구축과 추진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192-194쪽 참조.

45) 한·중 수사 공조의 성과와 한계에 보고된 초국가범죄에는 보이스피싱, 개인정보유출과 도피범죄인 강제송환 등이 포함되어있다. 김영규, 위의 책, 2014, 199 쪽

46) 김지영 외 3인, 『국의출장 보고서: 제2회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제3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한·중 반부패정책 비교연구

김은영·정유진

한·중 반부패정책 비교연구

제1절 제3차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의 성과와 평가

1. 개최배경 및 의의

박근혜 정부 국정기조인「평화통일 기반 구축」⁴⁷⁾추진 전략 중 하나인 「동북아 평화 협력구상」⁴⁸⁾은 다자협력체제를 통해 역내 평화를 구축하고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를 유도하여 북핵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

한국에서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⁴⁹⁾(일명 김영란법)이 제정되었고, 중국의 경우 시진핑 국가 주석이 반부패를 여러 차례 강조하였으며, 지난 3월 15일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 12기 3차 회의에서 ‘반부패법’이 주요 입법과제로 제기⁵⁰⁾된 만큼 반부패는 양국의 주요 관심사이자 협력 현안이라 할 수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이하 행정원) 이와 같은 취지에서 2015년 9월 19일 지린성 장춘시에 소재한 지린대학 법학원과 제3차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을 공동개최하였으며, 「동북아의 부패범죄와 범죄예방」의 주제로 한·중 반부패 대책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사전 준비를 위해 같은 해 1월 중국 장춘시에 위치한 길림대학 법학원을 방문,

47) 4대 국정기조 중의 하나로 3대 전략 및 1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청와대 홈페이지 참조. <http://www1.president.go.kr/policy/assignment04.php>

48) 박근혜 정부의 3대 외교정책 기조 가운데 하나로, 원자력 안전, 에너지 안보, 환경·기후변화, 재난관리, 사이버 스페이스, 마약 및 보건 등 연성안보분야에서의 협력을 시작으로 논의 범위를 경성안보분야로 확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49) 약칭 ‘청탁금지법’, 법률 제13278호, 2015.3.27 공포, 2016.9.28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9583&efYd=20160928#0000>

50) 장더장(张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올해 전인대 중점 과제로 반부패법의 입법 및 반테러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ttp://gov.163.com/15/0309/11/AK8SQGNB00234II1.html>(중문)

쭈다이 부학장을 비롯한 법학원 교수진 및 관계자와 준비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는 기존 동북아포럼의 성과를 계승, 향후 지속확대발전에 있어 해당 포럼의 진행과 주관 체계의 정비가 필요한 점에 대해 동의하였으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중국 내 각 참여대학 법학원이 매년 공동주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며 각 년도 주관 기관은 참여기관 합의로 선정 등 동북아포럼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⁵¹⁾

2. 참가기관과 전문가

한국 측에서는 행정원의 김진환 원장을 비롯, 진승엽 부이사관, 김한균 국제협력센터장, 승재현 국제협력센터팀장, 강석구 연구위원, 홍영오 연구위원 및 김경찬 부연구위원이 참석하였다. 중국 측에서는 금번 포럼의 공동주최기관인 지린대학 외 랴오닝대학, 연변대학 및 흑룡강대학 총 4개 대학 법학원 주요임원 및 교수진이 참석하였다. 그 외에도 지린성 고급인민법원, 지린성 인민검찰원과 장춘시 중급인민법원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하여 자리를 함께하였다.

3. 일정

제3회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은 ‘부패범죄의 입법 연구’, ‘뇌물수수범죄의 문제점과 인정’, ‘부패범죄의 실태 및 대응과 사법협력’, ‘부패범죄에 관한 정책적 연구’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 1일 동안 진행되었다. 포럼 전날인 9월 18일에 개최된 개회식에서는 지린대학 법학원의 리젠화 부원장의 진행으로 각 공동주최기관장의 축사가 있었다. 개회식에 이어 김일수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한편 포럼의 각 세션은 행정원 참가자와 중국 측 참가자 2인이 공동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세션별로 3인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51) 김한균, 『국외출장보고서: 제3차 동북아포럼 준비회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표 3-1〉 제3차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 일정표

9월18일(금)	
	개회식
15:30~16:30	진행: 리젠화 지린대학 법학원 부원장 축사 리홍밍 지린대학 법학원 서기 김진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루원푸 랴오닝대학 법학원 원장 인마오귀 옌벤대학 법학원 서기 위이성 흑룡강대학 법학원 교수
16:30~17:30	김일수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강연
18:00	환영만찬
9월19일(토)	
	제1세션: 부패범죄의 입법 연구
08:40~10:00	진행 장쭈 지린대학 법학원 교수 홍영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표(15분, 통역 포함)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제정경과와 정책적 배경」 쉬다이 지린대학 법학원 교수 「중국수뢰죄의 입법발전경과와 미래전망」 강석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부패방지법상 신고자보호법제의 현황과 과제」 토론(30분)
10:00~10:30	휴식
	제2세션: 뇌물수수범죄의 문제점과 인정(認定)
10:30~12:00	진행 심즈런 랴오닝대학 법학원 교수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센터 팀장 발표(20분, 통역 포함) 자오빙구이 랴오닝대학 법학원 교수 「뇌물수수범죄중 “부정이의” 요건의 인정」 진승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이사관 「한국의 사이버선거운동 범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왕충 지린대학 법학원 교수 「수뢰죄 중 “타인을 위해 이익취득” 요건 논의」 토론(30분)

9월19일(토)	
12:00~14:00	오찬
14:00~15:30	제3세션: 부패범죄의 실태 및 대응과 사법협력
	진행 진창진 연변대학 법학원 교수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발표(20분, 통역 포함) 홍영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 및 대책」 사오창 심양시교외구인민검찰원검찰장·루쥔 랴오닝대학법학원부원장, 교수 「수뢰죄 양형문제연구 - L성 M교도소 수형자에 대한 연구」 김경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부패범죄 관련 대응과 한중 상호협력방안」 토론(30분)
15:30~16:00	휴식
16:00~17:30	제4세션: 부패범죄에 관한 정책적 연구
	진행 등위팅 홍콩강대학 법학원 교수 진승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이사관 발표(20분, 통역 포함) 탕위평 랴오닝대학 법학원 교수 「뇌물제공범죄처벌에 관한 정책적 고찰」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센터 팀장 「한국의 반부패정책 동향」 리치통 지린대학 법학원 교수 「중국 반부패의 목표 및 대책에 관한 범죄학적 해석」 토론(30분)
17:30~18:00	폐회식
	진행: 쉬다이 지린대학 법학원 교수 폐회사 차이리둥 지린대학 법학원 원장 김진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18:30	만찬

제2절 주요 발표내용⁵²⁾

1. 부패범죄의 입법 연구

제1세션에서는 장쉬 지린대학 법학원 교수와 홍영오 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부패범죄의 입법 연구를 주제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제정경과와 정책적 배경’(김한균 국제협력센터장), ‘중국수뢰죄의 입법발전경과와 미래전망’(쉬다이 지린대학 법학원 교수), ‘부패방지법상 신고자보호법제의 현황과 과제’(강석구 연구위원)의 발표가 있었다.

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제정경과와 정책적 배경

2015년 3월 입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다. 다만 동법에 대해서는 법적, 정책적, 사회적으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그렇지만 공정한 사회를 위한 강력한 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동법의 제정과 시행은 기존 형법상 뇌물죄와 달리 청탁행위 자체부터 규제하기 때문에 부정 부패 방지를 위한 더 철저한 법제도를 갖추어 선진적인 부패방지 체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상당하다. 동법 시행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은 입법적, 정책적 분석에 따라 개선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52) 세션별 요약은 『제3회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간에 실린 발표문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나. 중국수뢰죄의 입법발전경과와 미래전망

‘중국수뢰죄의 입법발전경과와 미래전망’의 발표에서는 신(新)중국 수립이후부터 <형법개정안(9)>의 공포까지의 기간동안 뇌물수수죄의 입법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뇌물수수죄(受賄罪)는 직무상 횡령죄(貪污罪)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인 범죄유형이 되었고 나날이 완벽한 구성요건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다. 내부적 변화로는 행위 방식의 다양화, 신분론에서 직무론으로의 범죄주체의 전환, 재물에서 재산성 이익으로의 범죄객체 범위의 확대, ‘액수+정상’의 이중범죄성립기준의 확립, 형사처벌가중 등이고 그 외부적 변화로는 뇌물범죄 죄명체계의 전반적인 완벽화 및 엄밀한 법망의 형성, 뇌물제공죄의 처벌강화 등이다. 뇌물수수죄에 대한 입법상의 개정과 보충은 경제발전과 반부패의 요구에 기본적으로 적응되지만 계속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다. 부패방지법상 신고자보호법제의 현황과 과제

‘부패방지법상 신고자보호법제의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부패방지법상 신고자보호체계를 신변안전, 신분보장 및 손실보상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볼 때 해당체계의 문제점이 될 수 있다. 부패방지법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부패신고자의 안전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나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처리를 더 중시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제도의 설계 단계상의 오류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2. 뇌물수수범죄의 문제점과 인정

제2세션에서는 뇌물수수범죄의 문제점과 인정을 주제로 싱즈런 랴오닝대학 법학원 교수와 승재현 국제협력센터 팀장이 사회를 맡았다. ‘뇌물수수범죄중 “부정이익” 요건의 인정’(자오빙구이 랴오닝대학 법학원 교수), ‘한국의 사이버선거운동 범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진승엽 부이사관), ‘수뢰죄 중 “타인을 위해 이익취득” 요건 논의’(왕충지린대학 법학원 교수)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가. 뇌물수수범죄중 “부정이익” 요건의 인정

‘뇌물수수범죄중 부정이익 요건의 인정’에 따르면 중국 형법에서 부당이익의 취득은 뇌물죄의 성립요소에 해당하며, 위 요소가 누락되었을 경우 뇌물죄를 논할 수 없다. 다만, 행위자가 취하려고 했던 이득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학계와 현장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동일 사건 혹은 유사 사건이라 하더라도 지역마다 다른 판결이 내려져 뇌물죄에 대한 정확한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취득한 이익 자체가 정당하지 않고 심지어 불법적이라면 이는 논쟁의 여지없이 부당 이익에 속한다. 그러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취득한 이익도 과연 부당이익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즉,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자 양쪽 입장을 모두 감안한 종합적 판단에 근거하여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나. 한국의 사이버선거운동 범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의 사이버선거운동 범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다양한 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 사용의 대중화로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선거결과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는 유권자의 활발한 정치참여 및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반면 SNS 여론의 편파성, SNS를 통한 흑색선전, 후보자 비방 등의 위법사례가 발생하는 등 선거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역기능이 발생한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사이버선거범죄 대응체제에 있어 기술발전의 속도에 법과 제도가 부응하지 못하는, 즉 사이버범죄의 단속을 위해서는 죄형법주의 원칙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들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며, 사이버공간의 범죄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정법상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다. 개선 방안으로 선거현실과 괴리가 있거나 입법미비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선거관계법규 등의 지속적 정비를 제시했다. 궁극적으로는 단속체계 구축과 전문 인력 확보,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의 개발도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다. 수뢰죄 중 “타인을 위해 이익취득” 요건 논의

뇌물수수죄에 관하여 중국 형법은 ‘타인을 위한 이익 도모’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구성요건을 둘러싸고 입법상 존폐의 논쟁과 구성요건체계상 그 자리매김에 관한 논쟁이 존재한다. 전자는 입법론적인 문제로서 반드시 현재 중국 뇌물수수죄의 실정과 형사정책의 구체적 요구와 결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즉 현재 뇌물수수죄의 심각한 형세 그리고 ‘관대와 엄벌의 상호 결합’의 형사정책의 요구를 고려하면 ‘타인을 위한 이익 도모’요건을 폐지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뇌물수수죄 입법개정의 동향을 살펴볼때 현재 이 요건을 폐지할 어떤 흔적도 보이지 않는 이상 이 요건의 규정으로 발생한 처벌의 허점과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좁은 문제는 당분간 계속 존재할 수 밖에 없다. 후자는 해석론적인 문제로서 그 배후에는 죄형법정원칙과 형사처벌의 필요성간의 모순이 존재한다. 즉 ‘타인을 위한 이익 도모’에 관하여 이론상 여러가지 해석론이 존재하지만 모두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요건은 궁극적으로 입법상 문제이기에 그에 대한 어떤 해석도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3. 부패범죄의 실태 및 대응과 사법협력

세 번째 세션에서는 부패범죄의 실태 및 대응과 사법협력에 대한 주제로 진창권 연변대학 법학원 교수와 김한균 국제협력센터장의 사회로 논의를 이어나갔다.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 및 대책’ (홍영오 연구위원), ‘수뢰죄 양형문제연구-L성 M교도소 수형자에 대한 연구’ (샤오쑹 심양시 교외구 인민검찰원 검찰장·루쥘 랴오닝대학 법학원 부원장), ‘부패범죄 관련 대응과 한중 상호협력방안’ (김경찬 부연구위원)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가.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 및 대책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 및 대책’에 따르면 2015년 4월 16일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 발생의 원인 중 하나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 내재한 부패이며, 특히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정부 및 국가에 악영향을 주는 중범죄다. 공식통계 및 설문조사자료 분석

을 토대로 법과 제도, 사회·문화적 측면 및 조직 및 직무관련 요인의 개선을 통한 부패방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나. 수뢰죄 양형문제연구-L성 M교도소 수형자에 대한 연구

‘중국수뢰죄의 입법발전경과와 미래전망’에 따르면 L성M교도소의 뇌물수수죄 재소자를 분석 견본으로 하여 뇌물수수죄범의 양형 상황에 대해 연구조사를 진행한 결과, 뇌물수수죄 양형이 불균형하고 입법 과정에서 뇌물수수정상의 내용이 불명확하며 범죄자에 대한 개별적인 관리감독이 불충분하는 등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입법 규범의 명확성과 사법 실천의 활용성의 균형을 이루어 중국 반부패와 경제사회 발전추세에 발맞춰 가기 위하여 본고는 ‘액수+정상’ 확정이라는 이차원적인 유연한 양형기준을 확정하고 경계가 분명한 양형 등급을 설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다. 부패범죄 관련 대응과 한중 상호협력방안

‘부패범죄 관련 대응과 한중 상호협력방안’ 발표에서는 한중 양국의 부패에 대해 정의하고 각국에서 부패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한 문화와 관습의 특성이 적절히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이어 양국 부패관련 문제에 있어 원활한 상호협력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의 기초적 공동연구과제의 개발, 한중 수사 전문 인력의 확보 및 공동수사팀 구성, 다양한 협력기제의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4. 부패범죄에 관한 정책적 연구

마지막 세션은 부패범죄에 관한 정책적 연구를 주제로 동위팅 홍콩강대학 법학원 교수와 진승엽 부이사관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뇌물제공범죄처벌에 관한 정책적 고찰’ (탕위평 라오닝대학 법학원 교수), ‘한국의 반부패정책 동향’ (승재현 국제협력센터 팀장), ‘중국 반부패의 목표 및 대책에 관한 범죄학적 해석’ (리치통 지린대학 법학원 교수) 총 3인이 발표하였다.

가. 뇌물제공범죄처벌에 관한 정책적 고찰

‘뇌물제공범죄처벌에 관한 정책적 고찰’에 따르면, 2015년 북경에서 개최된 전국고급법원장 회의에서 최고인민법원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수뢰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하며 증뢰죄, 특히 자발적인 공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증뢰죄는 수뢰죄를 유발하는 요소이지만 실제 증뢰죄의 처벌은 미미하다. 현재 증뢰죄의 처벌이 강조되는 추세이나, 기존의 미약한 처벌 원인과 관련 정책 및 법률 기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증뢰죄의 근본적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 한국의 반부패정책 동향

‘한국의 반부패정책 동향’ 발표에서는 한국의 반부패 정책의 추진 배경 및 정책추진의 구체적 사례를 소개하였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향후 과제로는 부정부패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신규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수사관행과 감사활동 등의 문제점 개선 및 관계 부처 간의 협업의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 중국 반부패의 목표 및 대책에 관한 범죄학적 해석

‘중국 반부패의 목표 및 대책에 관한 범죄학적 해석’에 따르면, 제18차 전국대표대회(이하 18대) 이후 중국은 중앙정부의 시찰을 주도로 반부패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중국의 새로운 임기의 국가 지도자들의 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와 반부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반부패 전략의 적절한 운용이 반영된 것이다.

5. 성과 및 평가

제3차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에서는 양국의 공통 현안인 부패범죄와 반부패 대책을 논의하고 한중 양국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편 홍콩강대 법학원이 올해 포럼부터 참석함으로써 기존 공동주최측인 지린대학, 랴오닝대학 및 엔벤대학 등 동북3성 거점대학들과 더불어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의 지속확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제4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한·중 형사정책 비교연구의 과제

김 경 찬

한·중 형사정책 비교연구의 과제

제1절 중국의 한국형사사법 연구동향

1. 중국 형사법의 특징

중국의 형사법은 대륙법계 취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주의 법의 특성을 띠고 있다. 과거 청나라 말기이후 독일법과 일본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사회주의 체제의 성립으로 러시아와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러시아법의 개념과 특성이 주로 반영되었다.

그러나 개혁개방이 고도화되고 외국과의 교류가 심화·확대되어 감에 따라 외국 여러 국가의 형사법이 중국 내에 소개되기 시작하였고 한국의 형사법도 함께 소개가 되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형사법이 기본적으로 대륙법계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중국 역시 영미법계의 형사법을 직접적으로 중국의 법제에 도입하거나 반영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으며 유럽의 형사법제의 안정성과 논리성에 더 많은 관심과 선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일본의 침략으로 인하여 연구 내용과 방향에서도 일본의 영향을 불가피하게 받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후에도 일본은 지속적으로 중국 대학의 학자와 학생들을 초청하여 법학 논의와 법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겠다.

2. 중국의 한국 형사법에 대한 관심과 노력

한국 역시 일본의 침략을 겪었고 이를 통하여 일본의 법학과 법제가 한국에 이식되면서 일본의 논의를 통한 한국의 법학 논의가 해방 후 일정기간 이어져 오다가 유럽과

미국에서 수학한 학자와 학생이 증가하면서 서구의 법학을 직접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하며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였다. 이는 한국 형사법학이 일본의 관점과 논리를 벗어나 서구의 형사법학과 직접적인 교류와 논의를 통하여 근대법 정신을 한국에 뿌리내리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중국의 형사법학계는 한국의 형사법학계와 교류하면서 한국이 이러한 서구법 특히 독일형법에 많은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결과와 연구 성과가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가지고 그 외 미국과 영국 등 영미법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진행되어 있음을 주목한 것이다. 이는 어떻게 아시아 국가에서 서구법을 도입하여 운용하며 자신의 문화에 적용하는지와 관련하여 한국의 경험과 사례가 중국에 필요할 수 있고 또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국 형법학계와의 교류와 공동 논의진행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겠다.

중국은 현재 사회주의 형법체계로서 형법총론의 범죄체계에서 대륙법계와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에서도 한국, 독일, 일본 등의 대륙법계와는 일정부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를 통하여 범죄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이해를 심화시키며 중국 사회에 적합한 형사법 체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보호관찰 등 사회 내 처우와 관련한 부분 역시 새롭게 논의 중인데 역시 한국의 성공과 실패 경험이 중국의 법제 개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중국의 문화와 가치에 맞는 방식으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한국관련 내용은 비교법적 논의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와 경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관심과 함께 교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하겠다.

3. 중국의 주요 관심사항

그 뿐만 아니라 중국 역시 사법개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법원과 검찰 및 입법부의 상호관계가 한국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법개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중국의 사법개혁에 추진과 진행에 상당한 참고자료가 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학술대회에 한국 학자를 초청하거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관련 정보를 얻고 논의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하겠다.

그 외에도 신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관련 대응과 협력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경험과 논의를 통하여 상호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범죄수익환수와 관련하여서도 국제적인 신속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겠다.

반면 중국의 사이버 범죄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국내적으로 사이버 범죄는 매우 심각한 범죄이며 그 피해액도 2011년 5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사이버 범죄의 관할문제와 주권문제, 국내법 정비의 문제와 디지털 증거의 불명확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국제적인 실질적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련 공동논의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점진적으로 중국도 사이버 범죄 대응과 관련하여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4. 연변대학 법학원 한반도 법학연구성과 목록

형법

저서 著作

1. 韩国死刑制度改革及其对中国的启示/郭健/中国人民公安大学出版社/2009
2.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刑法典/陈志军/中国人民公安大学出版社/2008
3. 中韩死刑制度比较研究-“第五届中韩刑法学术研讨会”学术文集(中朝刑法比较研究系列之五)/赵秉志/中国人民公安大学出版社/2008
4. 中韩经济刑法比较研究-“第四届中韩刑法学术研讨会”学术文集(中朝刑法比较研究系列之四)/赵秉志、张军/中国人民公安大学出版社/2008
5. 韩国刑法总论/金日秀、徐辅鹤/武汉大学出版社/2008
6. 中韩国际刑事司法协助及相关犯罪研究-“第三届中韩刑法学术研讨会”学术文集(中朝刑法比较研究系列之三)/赵秉志/中国人民公安大学出版社/2006
7. 中韩刑事制裁的新动向-“第二届中韩刑法学术研讨会”学术文集(中朝刑法比较研究系列之二)/赵秉志/中国人民公安大学出版社/2005
8. 中韩刑法基本问题研究-“第一届中韩刑法学术研讨会”学术文集(中朝刑法比较研

究系列之一)/赵秉志/中国人民公安大学出版社/2005

9. 韩国刑法典及单行刑法/金永哲/中国人民大学出版社/1996

학위논문 学位论文

1. 韩国关于奸淫幼女犯罪的立法以及保安措施的执行对我国的启示/崔美娜/延边大学硕士学位论文/2013
2. 中韩单位犯罪中双罚制的比较研究/崔丽娜/ 延边大学硕士学位论文/2012
3. 论我国环境刑法在立法和实践中存在的问题及完善-以韩国环境刑法为视角/朴龙国/ 延边大学硕士学位论文/2012
4. 日韩少年法及其中国借鉴/陈超/西南政法大学硕士学位论文/2012
5. 中韩两国检警关系比较/文艺兰/ 延边大学硕士学位论文/2010
6. 中韩两国网络犯罪比较研究/金时永/大连海事大学硕士学位论文/2009

정기간행물 期刊论文

1. 韩国的过失共同正犯理论及其对中国的启示/金光虎/2014韩国发展报告/2014
2. 韩国罚金刑的特色及其对我国的启示/邢綯红/东疆学刊/2013(3)
3. 韩国犯罪被害人保护立法考察与借鉴/张云鹏/政法论丛/2013(3)
4. 韩国反腐败法述评-附:韩国《关于腐败防止与国民权益委员会设立运营发》/韩相敦/环球法律评论/2013(2)
5. 韩国刑法不能犯之探究-以韩国刑法第27条为核心/郑军男、王茜/当代法学/2013(1)
6. 韩国检察制度介绍/梁坤/当代检察官/2012(4)
7. 韩国刑法中对被迫行为的规制及其对中国的启示/邢綯红/延边大学学报:社会科学版/2012(3)
8. 韩国新的犯罪被害人保护制度及其启示:以实质性保护犯罪被害人为视角/金昌俊/河北法学/2011(11)
9. 实质性死刑废除困于希望与绝望之间-韩国死刑问题分析/赵炳宣、赵秉志/法学杂志/2011(5)
10. 韩国的犯罪故意论及其启示/金昌俊/河北法学/2010(11)
11. 韩国等国家罚金刑制度对我国的启示/玄松鹤/东疆学刊/2010(2)

12. 中国延边地区涉韩毒品犯罪对策研究-以中韩警务合作为视角/崔军男/学术交流/2010(2)
13. 社会分层与韩国首尔的群体性暴力犯罪问题/安泳壹/金卡工程/2010(2)
14. 韩国刑事“量刑基准制度”推进动向及“量刑调查”主导权之争考察/社向前/西部法学评论/2009(3)
15. 中韩死刑制度比较研究/方元/企业家天地：理论版/2008(8)
16. 韩中犯罪故意论的比较法考察/金昌俊/东北亚法研究/2008(7)
17. 韩国现行刑法的变迁过程及理论特征/郑泽善/当代韩国/2008(2)
18. 中韩死刑制度比较研究：第五届中韩刑法学术研讨会综述/阴建峰、张勇/刑法论丛/2008(1)
19. 死刑制度改革与暴力犯罪死刑控制-从中韩死刑制度比较研究的角度/莫洪宪/河南省政法管理干部学院学报/2008(1)
20. 韩国死刑制度的回顾与展望/许一秦、郭健/政法论丛/2007(6)
21. 韩国刑法典之优劣与借鉴/石玮玮/法治与社会/2007(3)
22. 试论韩国的信息网络犯罪及相关文化政策/申玟丞/东疆学刊/2007(3)
23. 美日韩三国死刑适用状况及刑事政策反思/张远煌/甘肃政法学院学报/2006(5)
24. 中日韩三国税收犯罪的罪名比较/胡巍/集团经济研究/2005(17)
25. 韩国的《腐败防止法》和腐败防止委员会/张利/党建/2005(9)
26. 日韩犯罪被害人补偿制度比较及其对我国的启示/尹晓莉、付璇/贵州工业大学学报/2005(2)
27. 中韩反腐败法律制度之比较研究/殷涛、胡斌/山西警官高等专科学校学报/2005(1)
28. 韩国检察官职权简介/闵钊/检察实践/2004(3)
29. 韩国犯罪被害人保护法律制度该说/田思源/犯罪与改造研究/2004(2)
30. 韩国《腐败防治法》的制定和实施/李秀峰/新东方/2003(8)
31. 韩国刑法上的通奸罪考察/吴昌值/中国刑事法杂志/2003(6)
32. 中韩日刑事法中保护犯罪被害人制度的比较/金昌俊/东疆学刊/2003(1)
33. 中韩两国刑事法中的保护被害人制度比较/金昌俊/延边党校学报/2001(5)
34. 中韩法律文化交流的重要贡献-《韩国刑法典及单行刑法》序言/赵秉志/法学家/1996(6)
35. 大韩民国少年院法/陈中绳/青少年犯罪问题/1996(4)

제2절 중국의 형사정책연구기관

1. 길림대학 법학원

길림대학은 동북인민대학의 전신으로 1948년부터 법학교육 및 연구를 시작하였다. 60여년의 발전을 거친 뒤 길림대학 법학원은 중국 법학교육 및 법률인재양성의 중점 기지로 인정받고 있으며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법학원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현재 길림대학 법학원은 법학박사학위 수여자격(법학이론, 형법, 민상법, 경제법, 헌법과 행정법, 국제법, 법제사), 박사후 연구원 접수자격, 민상법, 법학이론, 헌법과 행정법, 경제법, 형법, 법제사, 소송법, 국제법, 환경과 자원보호법, 군사법학 및 법률 석사 등 분야의 석사학위 수여자격을 갖추고 있다. 그중 법학이론과 형법학은 국가중점학과로서 높은 수준의 연구환경을 제공한다. 길림대학 법학원의 교수진은 현재 99명으로, 교수 34명, 부교수 27명, 강사 3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요녕대학 법학원

요녕대학교 법학원은 1980년에 설립되었으며, 그 전신은 요녕대학 법학과이고 요녕성 첫 전일제 법학과 학부생 육성 및 연구기지였으며 2013년 교육부 전문고등교육 기관 전문학과 평가에서 21번째를 기록하였다. 요녕대학교 법학원은 법학박사학위 수여자격(경제법, 민상법, 국제법, 법학이론), 박사후 연구원 접수자격, 법학석사 및 법률석사학위 수여자격 그리고 성급인문사회과학중점연구기지(요녕대학경제법제센터)를 갖고 있다. 요녕대학 법학원의 전임교사는 현재 56명인데 그중 교수 23명, 부교수 26명, 강사 7명이다.

3. 흑룡강대학 법학원

흑룡강대학 법학원 전신인 법률과는 1980년에 창립되었고 1981년부터 법학전공 학부생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흑룡강대학 법학원은 법학이론, 민상법학, 경제법학 3개의 성급중점학과, 법학박사학위 수여자격, 박사후 연구원 접수자격, 민상법, 법학이론, 헌법과 행정법, 경제법, 형법, 법제사, 소송법, 국제법, 환경과 자원보호법

및 법률석사 등 분야의 석사학위 수여자격을 갖고 있다. 흑룡강대학 법학원은 지역적 우세 및 교원들의 외국어 우세를 살려 러시아 법률에 관한 수업과 연구를 그 연구특색으로 삼고 있다. 흑룡강대학 법학원의 전임교사는 현재 62명인데 그중 교수 24명, 부교수 25명, 강사 13명이다.

4. 연변대학 법학원

연변대학 법학원은 2003년7월에 설립되었고 그 전신은 1986년에 설립된 연변대학 경제법률과이다. 20여년의 발전을 거쳐 연변대학 법학원은 길림성 법학교육과 연구중심 중의 하나가 되었다.

현재 연변대학 법학원은 헌법과 행정법, 민상법, 형법, 경제법, 소송법 및 법률석사 분야의 석사학위 수여자격을 갖고 있다. 연변대학 법학원은 법학학과의 여러 분야를 전면적으로 건설함과 동시에 연변대학의 연구특색을 형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현재 연구특색은 동북아세아를 중심으로 하는 북한과 한국법 연구 및 민족자치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지방자치법의 연구이다. 근년에 연변대학 법학원은 지역적 우세와 교사들의 언어방면의 우세를 이용하여 한국, 북한, 일본 등 나라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취득했다. 연변대학 법학원의 전임교사는 현재 31명인데 그중 교수 6명, 부교수 12명, 강사 13명이다.

5. 내몽고대학 법학원

내몽고대학 법학원은 1981년에 설립되었고 1982년부터 정식으로 법학전공 학부생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는데 내몽고자치구의 첫 법학교육 및 연구기구이다.

장기간의 발전을 거쳐 내몽고대학 법학원은 이미 내몽고자치구의 법률인재 육성 및 법학연구의 중심으로 되었다. 내몽고대학 법학원은 소수민족법학박사학위 수여자격 그리고 법학이론, 형법, 국제법, 민상법, 소송법, 헌법과 행정법, 법제사 및 법학석사 등 8개 분야의 석사학위 수여자격을 갖고 있다. 교수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교수 9명, 부교수 16명, 강사 15명이다. 내몽고대학 법학원 교수진이 맡은 국가급 연구과제는 5개, 성부급 과제는 8개이다.

제3절 한국의 중국형사사법 연구동향

1. 한국 형사법의 특징

한국은 앞서 간략하게 언급하였듯이 일본의 침략을 통하여 한국에 일본법의 이식과 연구방향을 도입하게 되었고 일본의 법학논의와 관점을 새로운 관점에서 국내법에 다시금 검토하고 비교하며 한국법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독일과 미국 등지로 직접적인 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논의를 확대하게 되었다. 이에 서구법을 한국에 직접적인 방식으로 소개하게 되었고 한국은 해방이후 일본법의 영향 하에 잠시 머물다가 서구법에 대한 연구와 검토로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게 되었다.

2. 한국의 중국 형사법에 대한 관심과 노력

이후 중국이 개혁개방과 함께 한국과 다양한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중국과의 형사법학의 교류도 시작되었고 중국의 형사법의 현황과 형사법 국가기관의 특징과 함께 형사법제가 서구의 형사법제와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관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중국이 형사법제의 개혁과 사법개혁 및 부정부패 개혁 등과 관련하여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로 학술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개혁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을 한국의 학회와 학술기관도 공감하면서 중국의 형사법제와 사법개혁 및 부정부패 개혁관련 추진방향에 관심을 가지며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사법 권력구조와 관련하여 한국의 경찰과 검찰 및 법원의 구조는 서구법의 도입으로 서구법제의 권력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찰과 검찰 및 법원의 구조는 입법부와의관계에서나 사법부 내에서의 구조에서나 한국 또는 서구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권력구조의 차이와 상호 견제방식 및 권력생성 방식에 대한 검토는 앞으로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한국 형사사법 실무계의 관심

반면 이러한 활발한 학술적 교류에 반해 실무적인 측면에서 형사사법공조는 일정부분 협력이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의 수에 비하면 상당히 저조한 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이버 범죄의 대응도 마찬가지로 양국의 경찰과 검찰의 상호협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매우 미미한 정도로 실제적인 해결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학계가 이러한 실무계의 관심과 필요성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에 대해 학술대회나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형사법 실무관련 문제도 활발하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중국이 실질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서는 상호문화와 조직 관계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일정부분 유교적 문화와 동양의 문화와 관습을 공유하고는 있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상호간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떠한 것인지 상호 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며 협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류의 기회를 확대하고 형사사법 관련 논의의 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5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결론

김한균

결론

1.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한·중 형사정책 연구협력의 과제

현재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해 제시되고 있는 협력의제들 중 상당수는 형사사법 분야의 정책의제이기도 하다. 사이버 범죄나 마약 외에 원자력 안전이나 재난관리, 기후변화와 환경 및 보건 문제 등도 위험요인으로부터 안전사회 구축의 측면에서는 안전정책으로서 형사사법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다. 범죄뿐만 아니라 사고나 재난 등의 위험요소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별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적 국제적의 대응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형사정책적인 전망과 함께 법적·제도적 정비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현재 정부는 원자력 안전과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재난관리, 사이버스페이스, 마약 및 보건 등을 동북아 지역 내에서 공동의 위험요소가 되는 비전통적인 연성안보 의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 내 국가들에게 공통적인 위험요인이 현안이라면 모두 연성의제로서 논의와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⁵³⁾ 형사사법공조나 인권보장 등을 위해 국가 간 협력이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는 형사사법 분야는 비전통 연성안보 의제로서 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활성화하는데 적합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 주요국가인 한국과 중국은 상호협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시점에서 형사사법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교류협력관계 기반위에서 동북아 평화를 주도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굳건히 다져야 한다.

53)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지속적으로 미개척 분야의 이슈를 발굴함으로써 지역 내 협력의 공백을 채워주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2015, 15면.

또한 최근 들어 중국이나 동아시아 국가를 거점으로 하는 불법온라인 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는 내국인들이 그 도피처로서 중국이나 동아시아 국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 내 한중간의 사법공조 시스템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구축될 필요성이 인정된다. 특히 국내발생 범죄와 초국가적 범죄가 혼재됨으로써 그 구분 자체가 불명확해짐으로 인해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국가 간 협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한편, 부패현안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효과적 반부패 형사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중점적 연구주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⁵⁴⁾

첫째, 부패범죄 개별 유형별 특성의 세밀한 분석과 분류

둘째, 부패와 부패범죄 행위자의 본질과 범행경과에 대한 종합적 사례연구

셋째, 부패관련 공무원 및 기업인의 경험과 의식에 대한 면접조사

넷째, 경험적 연구와 이론적 모델의 결합을 통한 범죄학적 분석.

한중 양국은 반부패정책 및 부패범죄 현안에 있어서 이와 같은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공동연구와 교류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 동북3성은 한중 양국의 형사사법분야 협력체계 구축이 가장 필요하며 또한 가장 효과적인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으로서 동북아지역 연구협력사업의 중점지역으로서 의미가 크다. 따라서 동북3성의 주요거점대학과 형사사법기관을 중심으로 양국 공통의 현안관심사를 발굴하고 이를 동북아형사정책포럼과 공동연구사업을 토대로 연구와 실무 공히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동북아 형사정책포럼 발전을 위한 전망과 과제

동북아 형사정책포럼은 한국과 중국의 형사사법분야 협력기반으로서 의미 깊은 사업이다. 중국의 전략지역인 동북3성에 동북아협력사업의 중점을 둬으로써 효과적인 연구협력의 수행도 기대된다. 특히 동북3성 주요거점 연구기관과 양국 공동 현안에 관한 연구와 정책협의 뿐만 아니라, 그 성과를 바탕으로 동북아 내지 아시아지역에서

54) 김한균, 반부패 형사정책의 국제적 동향과 부패범죄학의 필요성, 2015

평화협력의 기반을 함께 구축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2015년 제3차 동북아형사정책포럼 참가기관들은 향후 동북아형사정책포럼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본 포럼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합의하였다. 2016년 한국 개최가 예정된 제4차 포럼은 앞으로 참여기관들 간 구체적 일정 및 장소를 협의할 뿐만 아니라, 반부패정책, 사회안전정책, 사이버범죄 대책 등 제4차 포럼 주제를 기획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몽고, 내몽고대학 등 포럼 구성기관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지역 국가, 즉 러시아, 일본의 형사정책 연구기관 및 형사사법기관의 참여확대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장준오 외 8명(2013), 2013 UN·국제협력사업성과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제1회 동북아형사정책 포럼: 아시아 공동체와 아시아
형법의 임무와 과제 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4), 제2회 동북아형사정책 포럼: 한·중 수사 공조체제 구축과
추진방향 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지영 외 10명(2014), 2014 UN·국제교류협력 사업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한균, 반부패 형사정책의 국제적 동향과 부패범죄학의 필요성, 형사정책연구소식
135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5), 제3회 동북아형사정책 포럼: 부패범죄의 처벌과 예방 자
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Abstract

UN•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Research for Crime Prevention (XI): Studies in Criminal Justice Policy for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VI

Comparative Study on Criminal Justice Policy in Korean & China : Anti-corruption Policy

Kim Han-kyun • Kim Kyung-chan

Kim Eun-young • Jung Yoo-jin

This research was conducted by the recognition of the need in institutionalization of regional cooperative mechanism in criminal policy for the realization of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Thus, the objectives are to review the possible cooperative agenda in the areas of criminal law and criminal policy between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hereinafter referred to as “China”) and to recommend the future plans accordingly.

Due to Chinese President Xi Jinping's anti-corruption campaign and Korea's enactment of Anti-Corruption Act, these two nations particularly share the criminal policy relating to anti-corruption as their current issues. Also in relation,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KIC) has hosted an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Forum on the subject of ‘Challenges and Strategies for Ending Corruption: Zero-Tolerance, Accountability and Integrity’ in December 2014.

Hence from 2015, the main focus regarding the trends in Korea & China criminal policy comparative studies and the cooperative research projects will be on the anti-corruption policies.

Chapter 2 provides the evaluation based on the achievements of 'Northeast Asian Forum for Criminal Justice(NAF)' held in the consecutive years of 2013 and 2014. Chapter 3 provides the evaluation on the achievements of the 3rd NAF, held on September 2015, with the main discussion themes focused on the Korea & China anti-corruption policy comparative studies.

Lastly, Chapter 4 analyzes the Korean criminal justice research trends in China as well as the Chinese criminal justice research trends in Korea in order to prospect the possible research themes for the upcoming Korea & China criminal policy comparative studies.

연구총서 15-B-08

한·중 형사정책 동향 비교연구 : 반부패 정책

발	행		2015년 12월
발	행	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	행	인	김 진 환
등	록		1990. 3. 20. 제21-143호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	화		(02)575-5282
홈	페	이	지 www.kic.re.kr
정	가		7,000원
인	쇄		경성문화사 (02)786-2999
I	S	B	N 978-89-7366-935-6 93360

연구원의 허락 없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